

2019 사회지표, 사교육비 늘고 기부는 줄고

초중고 학생들의 1인당 사교육비는 갈수록 느는 반면, 국민의 기부 참여율은 8년째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 임금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다.

18일 'YTN'은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19 한국의 사회지표'를 인용해 지난해 초·중·고생 4명 가운데 3명은 사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는 1년 전보다 2% 포인트 늘어난 수치이다. 학생 한 명의 월 평균 사교육비는 3만 원이 늘어난 32만 원으로 집계됐다.

대학교와 전문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2018년 기준 취업률은 67.7%로 전년보다 1.5% 포인트 높아졌다. 계열별 취업률은 의약계열이 83.3%로 가장 높았고, 인문계열은 57.1%에 머물렀다.

지난해 한국 국민의 기부 참여율은 25.6%로 2017년과 비교해 1.1% 포인트 감소했다. 소득은 늘어나지만, 기부 참여율은 2011년 이후 8년째 계속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임금근로자의 지난해 월평균 임금은 313만 8천 원으로 1년 전보다 11만 원 늘었다. 하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 임금 격차는 196만 9천 원으로 해마다 격차가 커지고 있다.



▲ 지난해 초·중·고생 4명 가운데 3명은 사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0명 중 3명은 결혼 후 자녀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녀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여자가 남자보다 많았고, 연령층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결혼 후 자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았다.

남자의 흡연율과 음주율은 모두 감소한 반면, 여자의 흡연율과 음주율은 모두 증가했다.

삶의 만족도를 보여주는 웰빙지표는 나빠졌다. 삶에 만족한다는 사람의 비중이 6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고, 자신이 하는 일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줄었다. 또 국민 10명 중 2명은 외로움을 느꼈다.

해수욕장 예약제 도입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해수욕장 예약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에 앞서 방역당국과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 이용객의 분산 수용을 위해 해수욕장 예약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침은 무등록 방문 판매업소 등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이 지역 사회에서 연쇄 감염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성수기에 해수욕장을 찾는 많은 사람들을 관리하고 혼잡도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예약제는 코로나19 방역 관리를 위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예약제와 관련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시해 달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기도 했다.

전날 전라남도가 '안심 해수욕장 예약제' 시행 계획을 발표하였지만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준비 기간과 실효성 부족 등을 이유로 시행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해수욕장에 울타리가 설치돼 있지 않아 통제가 어렵는데다 찾아오는 피서객을 막을 명분도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해수욕장 예약제 시행 여부에 관계없이 지자체들은 해수부의 방역 지침을 최대한 준수한다는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날 해수욕장의 붐비는 정도를 이용객이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 서비스를 실시간 제공하기로 하는 등 해수욕장 이용객 분산 대책을 내놓았다. 적정 인원이면 초록색, 인원보다 최대 200% 많으면 노란색, 200%를 초과하면 빨간색이 켜지는 방식이다. 이 서비스는 다음 달 1일부터 해운대 등 전국 10개 대형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실시된 뒤 50개 해수욕장으로 확대된다.

투기과열지구, 전세 끼고 집 못 산다

서울과 과천·수원·안양 등을 포함한 경기 서남부, 인천, 대전 등 투기과열지구에선 전세대출을 받아 집 사는 길이 막힌다. 특히 서울 잠실·삼성·대치·청담동은 전세를 끼고 집을 살 수 없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17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이날 이런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살 때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한다. 집값 과열을 부추기는 '갭투자' (전세금이 긴 주택 매입)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취지다. 기존엔 9억 원 초과 고가 주택을 보유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제한했는데, 그 범위를 넓힌 것이다.

전세대출을 받은 뒤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즉시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서울 집값이 대부분 3억 원을 넘는 만큼 전세대출을 받아 집 사는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여기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 보증 한도도 2억 원으로 낮춘다. 기존엔 수도권 4억 원, 지방은 3억 2,000만 원이었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전입 의무도 강화된다. 지금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초과 주택 구입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1년 안에 전입을 해야 한다. 하지만 다음달부터 모든 '규제지역'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에서 집을 살 때 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이내에 전입을 해야 한다. 규제 지역에서 1주택자가 기존 집을 팔고 새 집을 사면 6개월 내에 새 집으로 이사 가야 한다.

정부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이달 19일부터 접경지역을 제외한 경기 서남부, 인천, 대전, 광주 대부분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었다. 서울 잠실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사업지 일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실거주자만 거래할 수 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천관우 변호사 그룹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전문 **프로디 관련 상담**

고국에 계신 부모님/배우자 영주권 신청

이민법

영주권 (취업 1,2,3순위 이민 - NIW, 국제적기업간부급, 간호사 포함,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 종교이민) 각종 비이민비자 (H1B, R1, E2, E1, L1, F1, O, P, TN/TD비자 등), DACA, 601A Waiver, 245i 추방유예상담, J1 Waiver, 영주권 인터뷰,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신청 *취업 영주권 상담 / DACA 연장접수*

부동산법

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강제퇴거명령(이박션)/Title에 대한 분쟁-Quiet the title/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상법

계약분쟁 소송/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천관우 변호사

서울고·연세대·법학박사
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josephlaw1224@gmail.com

☎ 상담문의

LA Office

213-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OC Office

714-522-5220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